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이현주

직장이 입양기관이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면 늘 질문을 많이 받는 편이다. '좋은 일' 한다는 인사말로 시작하여 대개의 질문은 요즘도 외국에 아이들을 많이 보내느냐, 도대체 어디서 입양 보낼 아이들이 자꾸 생기느냐 하는 것들로 이어진다. 그런 질문에는 상당 부분 힐책이 들어 있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 좀 곤혹스럽다. 제대로 답을 하자면 얘기가 장황해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답이 될지 변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입양,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사회복지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해 보고 싶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양자'를 들이는 일이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외국으로 입양 가는 일은 한국전쟁 이후에 생긴 일이다. 전쟁 직후에는 누구나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형편없이 부족했으니 전쟁고아들의 참상이야 오죽했겠는가. 그때 외신으로 한국 상황을 접한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전쟁고아들을 돕는 일이 많았고 그러다가 이 아이들을 아예 자기 나라로 데려가 키우려고 하면서 해외입양이 시작됐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넘는 지금도 외국으로 입양가는 아이들이 한 해에 2,000명이 넘는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사람들은 해외입양이 창피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OECD가맹국 중에 입양을 '보내는' 나라는 적어도 우리뿐이다. 어느 잘 산다는 나라 못지 않게 흥청거리는 소비문화가 맹위를 떨치고 한편으로는 제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조차 거두지 못하는 형편이니 창피한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어떻게 이 아이들을 외국으로 보내지 않고 우리가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그리 진지해 보이지 않는다. 당장이라도 해외입양을 없애려면 국내에서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 되는 일인데 말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보육시설은 아이들이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다. 소위 선진국에서는 보육시설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두 가지. 이 아이들을 낳은 부모가 직접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국내의 다른 가정에서라도 입양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너무 쉽게 하는 말처럼 들릴까?

일전에 한 토론회에서 스웨덴의 사례를 들은 일이 있다. 스웨덴은 지구상에서 최고의 복지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그 나라라고 해서 애초부터 지금과 같은 복지제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노동력이 요구되기 시작한 60년대 이래 여성들이 아이 양육문제로 발목 잡히지 않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탁아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고 아동수당, 육아휴직제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보조금, 무직 보험 같은 복지 혜택을 늘려나가 아이 기르는 일이 한 개인만의 일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일이 되다 보니 미혼모들도 자신의 아이를 스스로 기를 용기를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미혼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직접 기르는 일이 늘어나니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당연히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입양을 '보내야' 하는 아이들은 점점 없어졌고 부모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불임부부들은 외국에서라도 아이를 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다시 우리가 처한 현실로 돌아와 보자. 국내에서 입양이 좀처럼 늘지 않는 이유를 흔히 혈통을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 때문이라고 한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한 설명이 될까? 성인이라면 누구라도 가족계획협회의 온갖 표어들이 저절로 줄줄 외워질 만큼 늘어나는 인구 걱정을 한 게 엇그제였는데 이제 거꾸로 급격한 출산율 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이를 길러본 가정이려면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를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일을 해야 하는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이라면 더욱 그렇다. 외할머니나 친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는 경우, 믿고 맡길 만한 사회적 장치가 거의 없는 데다 개인 도우미에게 의존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니 결혼한 부부도 버거운 육아를 미혼모가 어찌 감당할 것이며 낳을 수 있는데도 안 낳으려는 풍조 속에 입양이 늘어나기가 쉽겠는가?

입양만 한정해서 말하자면 무엇보다 미혼부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10대 미혼부모가 70%를 육박하는 이즈음 실질적인 성교육을 포함한 예방 프로그램이 절실하고, 그나마 입양하려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관련 제도들을 빨리 개선하고 입양가족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한 늘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이 땅에 태어난 누구라도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외환 위기 이후 소득격차는 더 커져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었고 노동자, 농민, 서민은 더욱 가난해졌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젊은 이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정규직 노동자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훨씬 더 많아지고, 기업의 구조조정은 반복되고, 신용불량자는 넘쳐나고, 이민상품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고... 최근엔 하루 평균 자살하는 사

람 수가 36명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뉴스보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벼랑으로 내몰리는 삶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얼마나 팍팍한 곳인지 웅변하는 징표들이 아닌가?

얼마 전 입양인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덴마크, 노르웨이, 룩셈부르크로 출장을 다녀온 일이 있다. 지난해 입양된 어린아이부터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성인에 이르기까지 20여 명의 다양한 연령대의 입양인과 그들의 부모를 만나는 동안 여러 가지 감회가 교차하는 한편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적 배경에 대한 부러움 또한 떨칠 수가 없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무거운 세금을 내고, 주거문제며 교육비, 의료비 같은 데 신경쓸 필요 없고, 개인이 따로 노후 준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으니 말이다.

이러한 복지 제도가 안착된 유럽 국가들은 보통 예산의 30~40%수준을 사회보장비용으로 쓰고 있고 남미 국가들 대부분도 사회복지에 20%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떤가. 유럽은 접어들더라도 남미나, OECD 국가들의 단순 평균치인 2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 정도를 사회보장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그러니 생활고를 비판한 엄마가 아이를 안고 뛰어내리기까지 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지도 못하고, 해마다 겪는 물난리에도 여전히 국민의 동정심을 자극하여 모금을 재촉하는 것이 우리의 복지 수준인 것이다.

물론 국가의 예산을 사회복지에 충분히 투입할 수 없는 핑계거리가 있다. 어느 나라보다 과도하게 지출해야 하는 방위비만 해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반박 논리와 재원조달의 해법 또한 제공해 왔다. 다만 부족한 것은 아직도 국민들 스스로가 사회복지를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 또한 최우선적으로 수행

해야 할 의무가 바로 복지임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들이 복지를 제도로 정착시켜 가는 동안 특별히 착한 사람들이 배푸는 온정과 자선에 기대어, 혹은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사랑과 희생과 봉사'에만 의존해서 겨우 흉내만 내는 시혜적 차원의 복지는 이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좋은 일' 한다고 하는 인사말은 이제 그만 듣고 싶다. 세금 내는 국민이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은 배고플 때 식당에 가서 밥값을 내고 밥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다. 배고픔을 해결했다고 해서 굳이 식당주인에게 좋은 일 한다고 따로 인사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아닌가. '좋은 일' 하는 대신 당연히 해야 할 자신의 업무에 충실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다. ■

이현주 humanbeingkr@yahoo.co.kr | 1984년부터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일하고 있으며 홀트노조위원장, 전문노련 편집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